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정책방향

수급악화로 고유가시대 장기지속 전망 경제구조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꿔야

美석유재고 감소가 가격급등 부추겨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국제유가가 최근에는 배럴 당 30달러대를 넘는 수준 까지 올라 이제 막 IMF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는 우리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최근의 유가 인상의 원인에 대하여는 산유국의 생산감축과 가격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 미국 등 주요 소비국의 재고수준 감소, 선물시장의 투기자본의 영향과 함께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논의될 수 있겠으나, 어쨌든 한정된 자원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한 언젠가는 닥쳐올 수 밖에 없었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의 유가동향은 다행히 현재로서는 1, 2차 오일쇼크 때와 같은 단기적인 유가폭등 상황이나 수급악화 문제는 표면에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비하여 상당히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 석유소비 6위에 석유수입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국이면서 국내 에너지소비의 97%를 해외에 의존하여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국제유가의 동향이 자못 걱정스러운 일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고유가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차제에 우리 경제·사회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꿈으로써 고유가 상황만 오면 취약함을 드러내는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기 위한 시책에 박차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도 정부에서는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고유가 상황을 맞아 기존의 시책들을 재정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지난 9월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국무회의 등을 통하여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구조



金 東 源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

'혁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범국민적으로 그동안 느슨해져 있었던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 소비구조의 혁신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의 구축과 함께, 대체에너지의 개발, 해외자원 개발 및 적정한 자원비축을 통한 위기대응능력의 제고 등을 담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보다 나은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에너지이용시스템의 효율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데에 있다. 에너지가격의 적정화를 통한 시장기능의 제고와 범국민적인 절약의식의 고취는 이러한 시스템의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전국민 에너지 절약운동 펼쳐야

금번의 정책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고유가 상황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사회체질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먼저, 단기적으로 국민 전반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에너지절약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자료를 보면,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소득수준은 3배가 넘지만 1인당 가정상업분야 에너지소비를 보면 우리와 비슷한 정도로 아직 우리 국민의 에너지소비 절약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쓰지않는 플러그를 빼두는 습관, 적정한 냉난방온도 유지, 급제동 급출발 않기, 불필요한 짐을 트렁크에 싣고 다니지 않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그 절약효과와 실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상회 등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지혜를 담은 홍보자료를 전국 가정마다 배포할 생각이다. 하지만, 단순히 국민들의 에너지절약만을 통해 고유가를 극복하자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그 동안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소비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바 있다.

산업체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시설·공정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산업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를 촉진하는 한편, 시설·건물 등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 다소비형 시설의 개체, 공정의 개선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포항제철 등 1백44개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투자완료 후 연간 6천억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국회의사당, 정부청사 등 7백25개 건물·시설 등의 에너지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대체한 바 있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기기 등의 효율등급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사용을 촉진하고, 일부 고효율제품에 대하여는 인증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에너지사용시스템 자체를 효율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냉장고, 에어컨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효율등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6mm형 광등 등 14개 품목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가스보일러 등에 대하여도 효율등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인증품목도 5개 품목을 확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차보급 확대와 고연비차량 개발 등에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일반난방에 비하여 에너지효율이 월등히 높은 지역난방과 산업단지 등의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하여도 지원과 보급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쓰레기 소각열이나 산업체 폐열 등을 활용한 소규모 지역난방사업(CES) 등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번의 고유가 상황에 대응한 정부의 에너지소비구조 혁신대책도 이러한 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

은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다. 먼저 우리나라 에너지소비의 55.8%를 점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나 공정개선 등을 유도하는 한편(물론 이러한 업종은 그동안의 에너지절약시책에서도 주요 대상이 되어 에너지절약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었던 점이나, 원료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등 업종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될 것이다), 에너지사용설비의 신증설시 에너지절약방안의 강구, 진단 활성화 등과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의 대폭적인 확대($5\% \rightarrow 10\%$), 자금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를 병행해 나가면서 산업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절약 기술의 개발, 최근 각광받는 IT 등 신기술 활용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IT, 바이오 산업 등 에너지 저소비형 지식기반 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근본적인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개선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유전개발 등 투자확대 필요

건물, 수송 부문에서도 단기적인 소비절약과 함께,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대중교통의 확충 및 물류 효율화 등 선진국형 에너지절약시스템의 개발, 보급에 주력하여 에너지소비

구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0부제나 카풀제 같은 것에 대하여도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의미형식의 시행보다는 보다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통행료, 주차료 할인 등 인센티브 설계를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낮게 유지되어 왔던 에너지가격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정화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소비구조의 혁신과 아울러, 보다 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의 개발이나 해외유전의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화석연료의 고갈문제나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뒤쳐지는 기술수준과 낮은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되어온 감이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단기적으로 2002년까지 총에너지의 1.4%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개발·보급을 위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예산을 33%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특히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체에너지원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에너지사업을 벌여 나가고 있는 바, 제주도의 경우에는 2006년까지 도내 전력수요의 10%를 풍력발전으로 공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도 그간 IMF 위기와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최근 이르크추크 가스전 개발과 베트남 15-1광구의 원유발견 성공 등에 힘입어 다시금 활성화 되는 추세에 있다. 정부도 이러한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주개발원유 도입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에너지위기시에만 나오는 에너지정책이란 것은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여론은 에너지위기가 되어야 강조되는 것이 사실인가보다. 에너지 소비구조의 혁신과 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일관된 정책의 추진과 투자가 절실하고, 나부터 실천이라는 온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쪼록 이번의 대책들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